

| 사회적 대화 현장 |

광주형 일자리, 천신만고 끝에 극적 타결

1월 31일 광주시 –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

이동희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지난 3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논란됐던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임단협 유예” 유지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기지(빛그린산단)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를 위한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광주지역 노동계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다.

당시 광주지역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투자협상(안) 조항에는 ‘누적 생산목표대



수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후에도 광주시와 광주지역 노동계는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에 합의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마무리 협상에 성공했다.

논란이 됐던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조항이 노동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속 조항을 추가해 논란을 잠재웠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부속 조항을 통해 논란이 됐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광주지역 노동계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일자리 창출 넘어서 격차해소로 가는 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1월 31일 확대간부 파업을 벌이고 투자협약식이 개최되는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지부는 “지역형 일자리는 지역별 임금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와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 질서 붕괴와 임금의 하양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합의가 무산되는 등 천신만고 끝에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수준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넘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신설되는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모델과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